

문화일보 오피니언

기사 게재 일자 : 2013년 07월 23일

<時評>

‘아베의 日本’ 제대로 보기

박철희/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일본연구소장



지난 21일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예상대로 압승을 거두었다. 개선의석 65석을 확보함으로써 비개선의석 50석을 합치면 115석이다. 게다가 연립여당인 공명당 의석까지 합치면 과반수인 121석을 훌쩍 넘는 135석을 확보한 것이다. 지금부터 2016년까지 일본에서는 국정선거가 없다. 따라서 아베 신조 총리는 1년짜리 단임 정권이 아니라 적어도 3년 간 총리직을 유지할 수 있는 장기 집권의 문을 열었다.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의 압승과 아베 정권의 앞날을 조망하면서 우리는 일본을 보는 한국형 착시(錯視) 현상을 넘어서야만 제대로 된 일본과 마주할 수 있다.

첫째, 자민당의 압승은 아베의 우경화 경향에 대한 국민적 지지의 표현인가? 아니다. 자민당의 승리는 ‘아베노믹스’를 통해 경기가 좋아지고 고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일본 국민의 기대를 반영한 것이지, 폭주하는 아베 정권에 대한 면죄부를 주거나 무조건적 지지를 밝힌 게 아니다. 또한, 자민당에 대항하는 야당들의 극심한 분열과 지리멸렬(支離滅裂)이 자민당의 승리에 일조했다. 2012년 중의원 선거, 지난 6월 도쿄(東京)도의원 선거에 이어, 참의원 선거에서도 이념과 조직 양면에서 갈라진 야당은 자민당의 승리를 위한 보조자에 불과했다.

둘째, 압승한 아베의 자민당은 헌법 개정에 올인할 것인가? 아니다. 우파 성향을 가진 아베 총리가 자신의 신념인 헌법 개정을 미룰 이유는 없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자신의 인기 비결이 경제 회생에 대한 국민적 기대라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경제 회생과 개헌은 양자택일형(兩者擇一型) 과제가 아니라 동시 진행형 과제다. 경제가 무너지면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경제에 방점을 둘 수밖에 없다. 헌법 개정은 야당의 동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만 추진이 가능한 어젠다여서, 선거에 승리했다고 해서 하루이틀에 똑딱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다.

셋째, 아베는 선거 승리감에 도취해 우경화를 향한 폭주를 시작할 것인가? 아니다. 무엇보다도 선거 직전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大阪) 시장이 거침없는 군대위안부 비하 발언으로 인기가 급락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 일본 유권자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 등 국제사회의 비판이 건재하다는 학습 기회가 있었다. 물론 우파 성향의 지지집단이 강한 아베 내각은 우경화의 발길을 멈추지 않을 공산이 크다. 그렇다고 우경화 일변도로 정치적 에너지를 낭비할 만큼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일본의 유권자는 이념적 만족보다 생활의 개선을 원한다. 우경화의 흐름은 아베 총리의 신념에 더해 주변국의 발언 및 행동 수위에 따라 가변적인 양상을 보일 것이다.

넷째, 아베 총리는 상대할 수 없을 만큼 우파 성향을 가진 이념적 확산범인가? 아니다. 그는 자신의 신념을 주저없이 내뱉는 이시하라 신타로 전 도쿄도 지사나 하시모토 오사카 시장과 같은 지자체장과 다르다. 그는 이념형 인간이기 이전에 국익을 가늠할 수밖에 없는 일국의 총리다. 아베에게는 자국의 자존심을 높일 내부적 욕구도 있지만, 대외 환경을 안정시켜야 할 책무도 있다. 오히려 정권 기반을 안정화시킨 아베 총리는 여타 총리들이 꿈도 꾸지 못했던 외교적 과제들을 마음만 먹으면 타결할 수 있는 정치적 힘을 손에 넣었다. 아베에 대한 기대를 시험도 하지 않고 버려서는 안 된다.

다섯째,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 내각 아래서 한·일 관계 개선의 여지는 거의 없는가? 아니다. 아베는 보수 내각으로서 한·미·일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진 총리다. 미국도 한·일 관계의 개선을 바라고 있다. 중국과 당당하게 맞서려면 한국을 감싸 안아야 한다는 사실을 아베 총리가 모를 리 없다. 다만, 역사와 영토 문제로 얽힌 양국 관계에 대화의 물꼬를 트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이제는 참의원 선거도 끝났다. 한국이 지나치게 일본을 경시(輕視)한 나머지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거나 일본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다면 관계 개선의 여지는 선거 이전보다 아주 높다.

한국 정부는 일본에 대한 착시 현상에 함몰되지 말고, 일본과 대화를 통해 관계를 개선할 모멘텀을 놓치지 말기 바란다.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